# "내 주민등록 아무나 떼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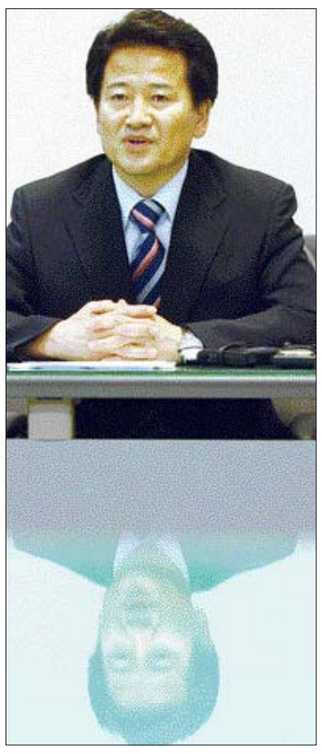
## 정동영 "이명박 정치공작 운운말고 땅 투기 해명해야"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16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위장전입에 대한 의혹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의 적법성 문제로 초점이 변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이 도둑질을 했는지가 문제인데 도둑이 어떤 길로 왔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또 "이 같은 행위는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정동영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가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전 시장 일가가 전국 50여 곳에 광주 월드컵 경기장의 300개를 지을 땅을 사서 투기했다는 의혹 제기를 정치공작이라고 물타기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며 "이 전 시장은 서울시장, 현대건설 사장 재직시 일어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이 후보를 압박했다.



정 전 의장은 이어 "국민은 부정선거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땅투기를 일삼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전 시장은 정치공작 운운 등을 즉각 중단하고 땅 투기를 해명하지 못할 경우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해체 논란과 관련, 정 전 의장은 "열린우리당은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대통합을 결의했으며 이는 명문화는 아니지만 정치적 해체를 담고 있다"면서 "우리당 사수로는 한나라당을 이길 수 없는 만큼 발전적 해체가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참평포럼은 경선과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참여정부는 역사가 평가하는 것으로 참평포럼은 참여정부가 잘 마무리하도록 돕는 것이 임무다. 참평포럼의 정치세력화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의 경쟁에 대해 "선의의 협력과 깨끗한 경쟁을 통해 누가 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지 선택을 받겠다"며 "시대정신을 반영한 사람이 후보가 될 것이며 나는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北 영변원자로 가동 중단 발표… 18일 재개 6자회담 핵심 쟁점은?

# 北, 테러지원국·對北제재 해결 연계
# 美, HEU등 北핵시설 자진신고 요구

〈고농축우라늄〉

북한이 영변 원자로의 가동중단 발표를 계기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청산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등 미신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를 촉구, 18일 재개될 6자회담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북한 외무성은 15일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 사실을 공식 발표한 뒤 "우리가 할 바를 다한 조건에서 이제 2·13합의의 완전한 이행은 다른 5자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며, 특히 미국과 일본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는 실제적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며 적대시정책 해결을 강조했다.

김명길 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을 미 국무부에 통보했다"면서 "북핵 불능화 등 2단계 약속이행을 위해선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 미국의 상응조치들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석대사는 특히 "영변 핵시설 폐쇄 직후 미국의 북한에 가하고 있는 경제 제재와 테러지원국 명단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 두 사안을 연계할 뜻을 분명히했다.

앞서 한성렬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대리소장은 지난 4일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초청으로 런던을 방문,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금만 해제됐을 뿐 아직 미국의 경제제재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며 "2·13 합의 이행을 위해선 경제제재가 다 해결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의 궁극적 목적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과 금년 2·13 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은 단지 첫 번째 조치이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플루토늄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음 조치는 감춰진 HEU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했는지 설명을 듣고 핵무기와 핵물질을 완전신고토록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북한은 지금도 우라늄 농축을 통해 무기급 물질 생산을 추구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비밀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음 논의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 6자회담에서 북한의 HEU 프로그램 신고 등을 쟁점화할 뜻을 명확히했다.

/워싱턴=연합뉴스

# 손학규 "호남발전 위한 삼각벨트 구축해야"

범여권·비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6일 "호남지역이 발전하려면 광주와 목포, 여수(광양)을 잇는 삼각벨트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 건설현장을 찾아 "호남고속철도의 조속한 완공, 광양-목포 고속도로 건설 등 물류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며 무안국제공항 개항이 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남해안권 개발과 관련, 손 전 지사는 "J프로젝트와 F1경기장 개발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서남권이 갖고 있는 자연조건과 개발 가능성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J프로젝트를 빨리 추진, 국제적인 서비스산업과 문화·관광·레저 산업을 키우고, 무안~광양~사천을 잇는 우주항공 산업을 개발해 호남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목포가 산업과 교역, 물류의 중심으로 부상하면 광주·호남권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여권의 대통합과 관련, 그는 "대통합은 국민통합의 첫걸음"이라며 "작은 차이에 급급하지 말고 대동단결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두관 "조건 없는 대통합이 국민의 뜻"

친노 진영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16일 "친노진영 주자 중 유일하게 영남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싸운 사람"이라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호남은 저항적 지역주의이고, 영남은 집권적 지역주의인데 영남에서 총선과 도지사 선거 등 두 번이나 선거에 출마하는 등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합은 민주개혁진영의 숙명이며 대통합을 통해 단일전선을 형성하는 것 이외에는 (대선승리의) 다른 길이 없다"며 "특정 세력을 배제하는 것은 대통합이 아니며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 시민사회세력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합을 통해 한나라당과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광산구 광산업단지를 방문하고 광주 장애인총연합회 회장단을 접견했다. 17일에는 친노 세력인 참평포럼 광주전남 운영위원 및 당직자들과 무등산을 등반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日선거 민주-자민 지지율 격차 커져

일본 정국의 격변을 예고하는 참의원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과 자민당의 지지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집권 여당의 과반의석 유지가 더욱 곤란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사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실시해 16일 보도한 참의원 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당장 투표 할 경우 비례대표에 어느 당을 찍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30%가 민주당을 택했다. 자민당은 23%에 그쳤다.

일주일 전 실시한 조사 때의 4%포인트 격차가 7%포인트로 커진 것이다.

또한 선거구 투표에서도 민주당이 32%로, 자민당의 26%를 크게 앞섰다. 선거 결과 야당이 다수당이 되길 바라는 비율도 54%로 증가했다. 여당측의 다수를 희망하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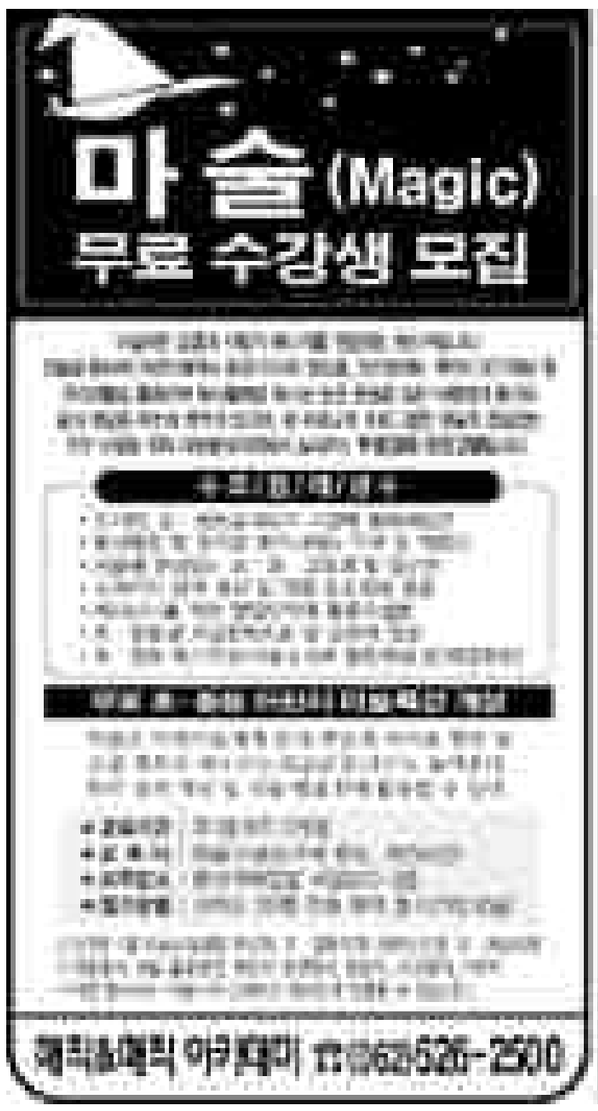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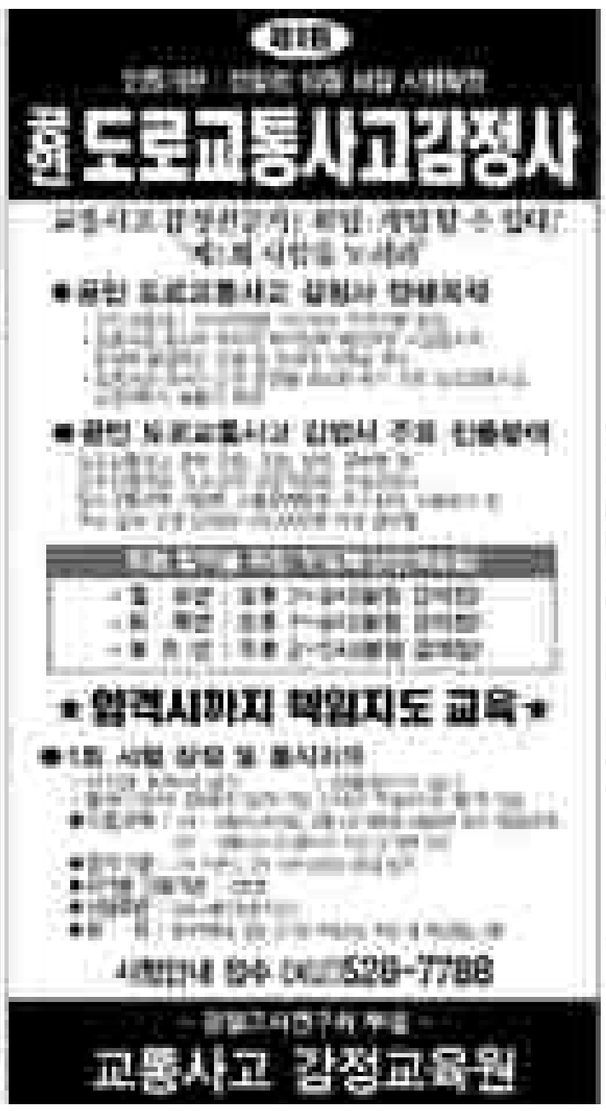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30%에 머물렀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55%로 작년 9월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정부의 부주의로 수천만건의 연금 기록이 사라진 문제가 여전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다 아카기 노리히코(赤城德彦) 농수산상의 사무실 비용 처리를 둘러싼 정치자금 문제까지 겹쳐 여당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자민당의 고전이 예상됨에 따라 아베 총리가 퇴진할 경우 누가 차기 총리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 日 니가타 강진…3명 사망 500여명 중·경상

16일 오전 규모 6.8의 강진이 일본 니가타(新潟)와 나가노(長野) 지방을 강타, 주민 3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다. 구조요원들이 가시와자키 지역 붕괴된 주택 잔해들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다.

/AP=연합뉴스